韓, 알래스카 현장 시찰… '트럼프표 에너지 사업' 갈림길

美 LNG 프로젝트

트럼프, 알래스카 자원 개발 주도
韓 대표단, 현장서 사업계획 확인
정치적 협상카드 넘어 경제성 주목

알래스카의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뉴시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통해 잠재력을 확인했다. 정치적 협상카드로 시작된 알래스카 LNG 사업이 경제성은 물론 사업성을 고려해 봤을 때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지난 2~3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4차 알래스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프루도베이, 포인트톰슨 등 LNG 프로젝트 핵심 지역을 직접 시찰하고 미국 측 관계자들로부터 개발 계획과 사업 설명을 들었다.

귀국 후 대표단 관계자는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협상이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장 시찰 기회가 주어져 프루도베이 등 사업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미국 측 발표도 있어 원료 가스에 대한 매장 잠재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해 약 13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 항구까지 운송한 뒤, 연간 2000만 톤 규모로 액화해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소요 비용은 440억 달러(한화 64조원)로 추산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자국 에너지 산업의 재건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제한을 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관세장벽 등 무역 이슈와 연결해 한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 언급 초반 무리한 사업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경제성과 지정학적 중요성 모두를 갖춘 사업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LNG 수출은 걸프만에서 이루어지면서 파나마 운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알래스카를 활용하면 파나마 운하를 우회할 수 있어 기후 변화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운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LNG 가격은 ▲원가스 생산 비용 ▲파이프라인 이용 비용 ▲가스처리 비용 ▲LNG 시설비용 ▲운송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알래스카의 원가스 생산가격은 1달러/mmbtu(가스 열량단위) 내외로 미국의 주요 LNG 생산 지역인 걸프만(3달러)이나 호주 LNG(2달러)보다 낮다.

운송비용의 경우 걸프만에서 생산된 LNG가 파나마 운하를 거쳐 일본 도쿄까지 운송할 경우 약 20~22일이 소요되며 운송 비용은 약 2달러/mmbtu지만, 알래스카의 경우 도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7~9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운송 비용은 0.7달러/mmbtu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모든 비용들을 적용했을 경우 알래스카 LNG는 mmbtu당 7달러로 걸프만 LNG(7.7달러)나 호주 LNG(10달러)대비 저렴한 가격이 형성된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LNG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 가격의 변동성도 줄일 수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알래스카 LNG는 미국과 동아시아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 협력 모델이다"며 "440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초기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주·중동 의존도 감소, 가격 안정화, 수입 믹스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재계 총수 만난다 내수활성화 등 경제현안 논의

G7 정상회의 전 경제계 목소리 청취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등 참석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이나 13일쯤 주요 그룹 총수들, 경제단체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직),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의 주요 의제는 최근 국내외 경제·산업 여건 및 향후 전망, 국내 투자 촉진·내수경기 활성화·지역살리기 등 경제 현안과 과제, 경제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재계와 만나는 것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내 산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관세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어서다. /서예진 기자 syj@

궁지에 몰린 트럼프… '특단의 언급' 기대도

〉〉 1면 '美 관세유예 째깍…'서 계속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무역 파트너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발송한 서한의 목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1심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관세 효력은 다시 살아났다. 지난 4월 초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ACO)'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영국과 맺은 유일한 협정 역시 최종 협정이라기보다 추가 협상을 위한 골격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특단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우리나라 역시 이 기간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양자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G7 회의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측 정상이 모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